

01

1石 3兆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

규제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

 추진부서 경기도 지역정책과 031-8008-4846

개선배경



-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면적 전국 363km²임
- 그간 지자체는 자원부족으로 도시공원 해소에 소극적이었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감수하였음.
- 공원이 실효되면 등산로 폐쇄, 지장물 설치, 난개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개선내용



개선전

-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:
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내
약 145개소, 총 9km²
(축구장 약 1,260개 면적)
- 지자체 필요 예산 약 3조원 추정



개선후

-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개선으로
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 될 경우
약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 예상

〈 훼손지 복구계획 제도 〉

- (개요)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·녹지로 복구하도록 '09년 도입 (개발제한구역법 제4조)
 - (훼손지*의 정의)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
 - *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필지
- '17년 6월부터 도내 미집행공원 전수조사, 도·시·군·공사가 참여한 간담회 개최, 국회·국토부 제도개선 방문·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적극행정을 추진
 - '18년 4.17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개정
 - '18년 8월 관련 지침 개정

기대효과



- 한 번의 개정으로 세가지 효과 즉, 시·군은 GB내 미집행 공원 해소로 약 3조원 예산 절감
- 주민은 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
 - 1km²의 공원이 할 수 있는 일 : 45만 그루 나무조성효과, 연 16.2톤의 미세먼지 흡수, 180만 명이 1년간 숨쉬는 공기 제공
- 도는 보전부담금의 재정적 불이익 해소

〈부천 원종·괴안 공공주택사업 훼손지 복구계획〉

- 위치 : 부천 원종동 일원
- 사업면적 / 훼손지 복구면적 : 280,000m² / 42,000m²
- 사업내용 : 부천 근린공원 조성 (복구사업비 150억)



1석 3조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



부 작성자 경기도 지역정책과 박인찬 031-8008-4856

경기도의 규제개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중앙부처 경진대회에 발표자로 처음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, 앞으로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

지금 그 날을 돌이켜 보면 본선에 올라온 10개팀중 첫 번째로 발표하게 되어 심적 부담도 컸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참석하신 심사위원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자 팀원들과 같이 준비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네요.

‘20.7월 최초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부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, 해결방안으로 “훼손지 복구계획”* 제도를 개선하고자 ’17.6월부터 사례조사, 관계자 간담회 개최, 중앙부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습니다. (*현행 : 건축물 · 공작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 공원 · 녹지 등 조성)

그 결과 ‘18.4월 “미집행 도시공원”을 훼손지 복구대상에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주민, 도, 시·군에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

주민은 미집행공원 조성으로 토지보상 및 휴식공간 제공, 도는 보전부담금 재정적 불이익 해소, 시·군은 미집행공원 해소로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
규제개선의 첫 걸음은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. 공무원 스스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주위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합리적 대안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.

규제개혁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. 본인 업무 중 불합리한 부분 찾아 보세요. 그에 따른 보람과 성취감은 무한대 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